

**도서관 관련행사 보고** : 문화예술단체, 새정부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들은 1월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참여해 새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새삼 느끼게 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의 주제가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과제설정 : 대통령직 인수위 선정 1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와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방향 제안"이었던 만큼, "문화정책의 기초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정책생산 단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문화연대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정책을 이야기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노사모, 국민경선, 붉은악마, 희망되지, 촛불시위 등 숨가쁘게 변해온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며 "노무현 당선자를 문화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지지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했다. 발제자의 논지는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과 "시혜적 성격을 벗어난 아래로부터의 문화적 실천을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고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확립', '문화적 생산성 제고' 등을 과제로 들었

다. 나아가, "문화계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토론자들 또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은 WTO 양허요청안 처리문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정책의 철학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이해경 대표는 '문화정책에도 여성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예총의 정남준 사무총장은 '공공성에서의 실천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판단보다는 정책연대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연극협회의 최종원 이사장은 '현실과 이론, 논리와 실천의 간극이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정책을 요구했고, 문화관광부의 이승규 문화정책국장은 '순수예술은 기초학문'과도 같으며 '문화적 삶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복지와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예총 박인배 기획실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도 문화정책 제안 토론회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됐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의 세기'가 시작됐다면서 문화산업 일변도로 추진돼온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문화예술계의 원죄를 청산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친일·군사독재문화의 잔재 및 순수참여 논쟁을 통한 현실적 이득을 챙긴 이들에 대한 개혁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주제는 “문화민주주의, 의미있는 문화예술, 참된 문화경제,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공존”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 문화예술계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들어 “문화예술계의 상호토론과 정책검증을 통해 추천자를 선발하자”고 주장했다. 또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정권에 따라 부서명칭이 바뀐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부로 복원할 것과 문예진흥원을 영화진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문문화예술인들의 위원회 구조로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영진위의 김혜준 정책실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기보장과 문화의 독자성의 보장’을 요구했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양현미 연구원은 ‘문화에서의 시장개념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문화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문화적 변화를 얼마나 겪었는가’

로 판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다양성, 문화적 주권, 대중의 접근과 참여 확대’등을 기조로 인선정책과 제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목포대 조경만 교수는 ‘인간존재로 인한 문화개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의 김수연 예술진흥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예술의 소비가 ‘정책수행의 관건’이라며 사랑티켓, 문화교류 등을 통한 ‘예술 맛들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문화정책의 의제생산을 위한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 분야의 의제와 개혁과제를 인수위에 제출할 것을 합의하고 의견취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문화예술단체들의 정책연대 및 의제개발과 개별과제 제안이 새 정부 문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54회 정기총회

- ◎ 일 자: 3월 28일(금) 예정
- ◎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 ◎ 주요일정:
  - 제35회 도서관상 시상
  - 안건심의
    - 2002년도 감사보고
    -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제21대 임원선출
- ◎ 연락처: 02-535-4868(유태형 팀장)